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김희중

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FTA Support Policy
Priority through Analytic Hierachy Process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김희중

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연구

지도교수 조승제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김희중

김희중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제2장 한국의 FTA 추진현황	3
제1절 FTA의 의의 및 효과	3
1. FTA의 의의 및 확산배경	3
2. FTA의 경제적 효과	4
제2절 한국의 FTA 추진전략 및 현황	6
1. 한국의 FTA 추진전략	6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7
제3장 한국의 FTA 지원정책 분석	11
제1절 FTA 활용 지원정책	11
1. FTA 활용 정보제공	11
2. FTA 활용 기업지원	14
3. FTA 활용 교육지원	18

제2절 FTA 활용 국내지원대책	20
1. 직접피해보전	20
2. 경쟁력 강화 지원	24
3. 소득기반 확충	25
제4장 FAT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27
제1절 계층적 의사결정 모형 설정	27
1. AHP기법의 개념과 우선순위 평가방법	27
2. 자료수집 및 계층분석구조 설정	32
3. 설문지 구성	36
제2절 FTA 지원정책의 중요도 산출결과	37
1. 일관성 검증	37
2. FTA 지원정책의 중요도 산출	39
제3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47
1. 분석결과의 요약	47
2. FTA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48
제5장 결 론	51
참고문헌	54
<부록: 설문지>	56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7
<표 2-2> 우리나라 FTA 추진 세부현황	8
<표 3-1> FTA활용 컨설팅 추진 절차	12
<표 3-2> 2013년 광주·전남지역FTA설명회 및 간담회	13
<표 3-3> 2013년 광주·전남지역FTA자료 발간 현황	14
<표 3-4> 우리나라 무역구제 제도	17
<표 3-5>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절차	22
<표 3-6>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24
<표 3-7> 소득기반 확충 지원방안	26
<표 4-1> AHP기법의 장점	28
<표 4-2> AHP기법에서 사용되는 척도	30
<표 4-3> 조사표본 집단 및 인원의 선정	33
<표 4-4>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36
<표 4-5> 조사표본 집단의 일관성 비율 검증 결과	38
<표 4-6>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평가결과(전체표본)	39
<표 4-7> 표본집단별 FTA 지원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43

【그림 목차】

<그림 4-1> FTA 지원정책의 계층분석구조	34
<그림 4-2> FTA 국내 지원대책 vs FTA 활용 지원정책(전체표본)	40
<그림 4-3>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정책별 가중치(전체표본)	40
<그림 4-4>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정책별 가중치(전체표본)	41
<그림 4-5> FTA 지원정책의 핵심사업별 복합가중치(전체표본)	41
<그림 4-6> FTA 지원정책의 핵심사업별 민감도(전체표본)	42
<그림 4-7> FTA 활용 지원정책 vs FTA 국내 지원대책(표본집단별)	44
<그림 4-8>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정책별 중요도(표본집단별)	44
<그림 4-9>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정책별 중요도(표본집단별)	45

A Study on the Selection of the FTA Support Policy Priority through Analytic Hierachy Process

Kim, Hee-Jung

Advisor : Prof. Jo, Seung-je, Ph.D.

Department of FTA Busines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FTA is a form of regionalism and also the start that the world since the 1990s entered hurriedly into a strategic FTA in between the countries to share the profits with them.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FTA concurrently from 2003, and has built a FTA network through the strategic FTA expansion, centered on macro economic area, resource-rich countries and major hub economic area. Korea started Korea·Chile FTA in 2004 and successively entered into the FTA with surrounding countries such as Korea·ASEAN FTA, and Korea·Singapore FTA and took the effect. Furthermore, Korea took the FTA effect with Korea·EU FTA as a macro trade area in 2011, Korea·America FTA in 2012, and Korea·China FTA in 2014, which mean joining the ranks of FTA developed countries from FTA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expansion of our global economy territory.

In fact,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our country, it is the time to need a major breakthrough to jump up as an advanced economy from a nut cracker between Japan in the aspect of technology and China in the aspect of cost. Therefore, FTA promotion of our government has many positive aspects because it will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promote a global standardization over the state-wide system which can promote a leap into the advanced economy. Because of it, the government inputs many human resources and much budget for a lot of

supporting matters such as FTA training, consulting, and IT systems, etc. to elevate FTA utilization in the private areas. Recently, the government strives to improve the FTA utilization by opening a FTA utilization support center, etc. Thanks to this policy, the trade volume has steadily increased and FTA utiliz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s increasingly higher. However, we do not use FTA to 100% until now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application and issue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e poor awareness of FTA, and cumbersome FTA certification paperwork procedure, etc. Our government as of the end of June 2013 announced a comprehensive plan for FTA activation, but there is a gap between what the FTA businesses actually feel and the government support programs for the utilization of the FTA.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what the priorities government policies and experts from sectoral job families are thinking are to enhance the FTA utilization and how we increase the utilization of FTA. The writer reflected various real cases of FTA utilization and failure b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Guangju FTA utilization support center and engaging in FTA consulting·consultation, the examination and issue of certificate of origin, etc.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draw out the analysis and method on the elevation of FTA utilization in the view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o utilize it as the standard data for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and the increase of business export.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in totality. The first chapter explained the object, structure and method of the study on the FTA support policy priority study title. The second chapter introduced Korea's FTA promotion status and details. The third chapter as an analysis of support policy separated and explained FTA utilization support policy and FTA domestic support measures. Based upon it, the fourth chapter yielded the establishment of Analytic Hierachy Process(AHP) and the importance of FTA support policies. In particular, when I set up the Analytic Hierachy Process, I

set up a hierarchical structure model of FTA support policies from the goal level 1 to 3 in the restriction of the surveyed 30 people and analyzed the results. The questionnaire was designed to survey and analyze what experts from each sector are thinking of the priority on FTA support policies promoted by our government, and based upon it, to utilize the data as the basis for policy improvement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results were made in the target of professionals, not public people, so the result value on the job engaged in each group appeared clearly.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fifth chapter drew out the conclusion and finished the thesi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FTA는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서 1990년대 이후 세계는 자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들간에 전략적인 FTA를 서둘러 체결한 것이 그 시작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체결 확대를 통해 FTA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연이어 한·아세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등 주변국들과의 FTA를 체결 및 발효하였으며 2011년 거대교역권인 한·EU FTA, 2012년 한·미 FTA를 발효하고 2014년에는 한·중 FTA를 타결함으로써 FTA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우리나라의 세계경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때 기술의 일본과 비용의 중국 사이에서 정체되어 (NUT CRACKER) 있는 상태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FTA 추진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 전반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 측면의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FTA교육, 컨설팅, IT시스템 구축 등 FTA지원 사업을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TA활용지원센터 등을 개설하여 FTA활용을 높이기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무역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의 FTA활용도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의 어려움, FTA에 대한 저조한 인식, 번거로운 FTA관련 서류절차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100%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3년 6월말 중소기업 FTA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FTA활용정책과 정부의 FTA활용 지원사업에 이질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분야별 직군의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어떻게 하면 FTA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가에 목적이 있다. 광주 FTA활용 지원센터 설립에 참여하고 FTA 컨설팅·상담, 원산지증명서 심사 및 발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FTA활용 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활용하여 금번 논문에 현장감을 불어 넣었다. 실무자의 눈으로 FTA활용도 제고에 대한 분석과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논문의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FTA지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FTA추진현황과 세부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장에서는 지원정책 분석으로 FTA활용 지원정책과 FTA 국내지원대책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층적 의사결정(AHP)모형을 설정하고 FTA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특히 4장에 계층적 의사결정(AHP) 모형 설정은 목표, Level 1 - 3까지 FTA 지원정책 계층구조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설문대상을 31명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별 우선순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FTA 정책활용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여 만들고자 하였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설문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응답자마다 설문작성에 대한 사전 교육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5장에서는 결론을 도출하여 논문을 마무리 하였다.

제2장 한국의 FTA 추진현황

제1절 FTA의 의의 및 효과

1. FTA의 의의 및 확산배경

FTA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협정으로 2개 국가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와 각종의 수입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역내국 간 교역을 증진시키고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이루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협정국 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FTA는 특정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으로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¹⁾ 등 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주주의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FTA는 체결국간의 특혜무역협정으로 협정의 체결 후에는 국내의 관련 제도가 선진화 됨으로써 대외신인도가 제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고 해외시장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

FTA는 계약 당사국 사이에 존재하는 관세장벽을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GATT 시대의 FTA는 협정의 내용이 역내국간의 상품교역의 자유화,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 일반적인 조항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WTO 체제로 변화되면서 체결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통합협정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협정 당사

1)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나프타'라고도 한다. 1992년 12월 미국·캐나다·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이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한다.

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정부조달정책과 무역규제법, 환경, 노동기준 등 협정 당사국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FTA의 경제적 효과

FTA는 경제통합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 동맹의 경제적 효과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협정 체결후 단기에 나타나는 정태적 효과와 협정체결후 장시간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나타나는 동태적효과로 구분된다. FTA가 체결되면 규모의 경제효과에 의해 생산능률이 향상되는데 정태적 효과는 체결국간의 역내 분업화에 의하여 생산능률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FTA 체결로 인하여 회원국 간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분업이 더욱 촉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역내의 전반적인 생산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도 나눌 수 있다.

FTA 역외국들은 자국의 무역전환효과에 의한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도록 하며 비효율적인 역외 국가들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이와 같은 성장전략에 의한 생산의 증대로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효과와 규모의 경제효과는 FTA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전환효과를 장기적으로 상쇄시켜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모두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FTA 경제적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정태적 효과와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동태적인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효과는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 FTA 체결로 인해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비와 재화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내부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외부경제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성은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태적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FTA 체결은 협정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보의 파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따르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 내지는 제거시켜줘 생산성 향상 및 투자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효과에도 다양한 외부경제효과가 있으나 동태적인

현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것이 생산비 인하, 수요증가, 생산의 증가의 과정을 거쳐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되고 특히 수입국의 예측하지 못한 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의 위험을 완화시켜 수출품의 생산 및 판매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FTA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교역이 가능하고 수입단가를 낮춰 수요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증진, 회원국의 자국 산업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제2절 한국의 FTA 추진전략 및 현황

1. 한국의 FTA 추진전략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협상을 체결하고 그해 9월 우리나라의 FTA추진전략을 담은 FTA로드맵을 수립하면서 FTA 협상에 본격 착수하였다. 2003년 마련된 로드맵에는 FTA 협상과 관련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동시다발적 추진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추진이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 FTA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이며,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의 경우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와 동시 추진함으로써 적자를 완화할 수 있으며, 협상 상대국의 적극적 태도유도, FTA협상 모멘텀 유지 및 협상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의 장점을 보유하는것이 그것이다.

우리정부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 고유범위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WTO의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FTA는 지역무역협정(RTA)²⁾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4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93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3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3%에 해당하는 343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³⁾

2)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하며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RTA는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3)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참고[2014]

2. 한국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경쟁국가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지만,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14년 1월 현재 거대선진경제권인 미국 및 EU와의 FTA를 포함하여 총 11개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총 9건 47국(크로아티아 포함)과 발효중이다. 또한 지난 2013년 2월 중남미 자원부국인 콜롬비아와 체결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12월 호주와 FTA타결 하여 정식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FTA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캐나다, RCEP⁴⁾ 등 6건 18개국이며, 협상재개를 위한 여건준비 중인 FTA는 TPP⁵⁾, 한·일본, 한·멕시코, 한·GCC⁶⁾, 한·뉴질랜드 등이다. 이외에도 MERCOSUR⁷⁾,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등 과도 FTA 협상준비를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표 2-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구분	발 효 (9건 48개국)	협상타결 (3개국)	협상 진행 (6건 21개국)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협상준비또는 공동연구 (4건 11개국)
상대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등	일본, 멕시코 GCC 등	MERCOSUR, 이스라엘 등

- 4)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아르셉’이라고도 한다. 역내 국가들의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해 RCEP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을 기본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 5)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2013년 4월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6) GCC[Gulf Cooperation Council]1981년 5월에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이 역내(域內)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 7) Southern Common Market의 스페인어 약어이다. 남미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양국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시초로 하여 1991년 11월 29일에 인접국인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포함한 아순시온협약이 체결됨으로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한 남미 공동시장은 4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1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다.

<표 2-2> 우리나라 FTA 추진 세부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9건 48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1 발효	최초의 FTA 중 남미 시장의 교 두보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2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1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 명(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무역협정 서명(09.5월 발효), 09.6월 투자협정 서명(09.9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 역대상(2011년 기 준)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7 서명, 10. 1. 1 발 효	BRICs국가, 거대 시장
	EU	07.5월 협상 출범, 10.10월 서명, 11.7.1 잠정 발효	세계최대경제권 (GDP기준)
	터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10.4월~12.3월), 12.8.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13. 5. 1 발효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1.3월 서명,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2.3.15 발효	거대선진경제권
협상타결 (4개국)	캐나다	05. 7.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 14. 3. 11 협상타결 선언, 14. 6. 12 가서명, 14. 9. 22 정식서명	자원부국 및 북 미 선진시장
	호주	09. 5.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 13. 12. 4 협상타결 선언, 14. 2. 10 가서명, 14. 4. 8 공식서명	자원부국 및 오 세아니아 주요시 장
	콜롬비아	09.3월~8월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공식협 상 개최(09.12월~12.6월), 12.8.31 가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약, 12.5.2 협상개시 선언, 총 13차례 협상 개최, 2014년 11월 타결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협상 진행 (5건 21개국)	뉴질랜드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후 잠정중단, 13.12.3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4차례 협상 개최(2014년 2,3,6,8월)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인도네시아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2년 7,12월/2013년 5,7,9,11월)	ASEAN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2011년 기준)
	베트남	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8.6 협상개시 선언, 12.9월 제1차 협상 개최, 총 6차례 협상 개최(2012년 9월/2013년 5,10월/2014년 3,5,7~8월)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 (2011년 기준)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10.5월~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12.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12.11.20 협상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 개최(2013년 3,7~8,11월/2014년 3,9월)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마련
	RCEP (15개국)	11.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12.11.20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 개최(2013년 5,9월/2014년 1,3~4,6월)	세계 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8개국)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 08~12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 총 9차례 개최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2011년 기준)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08.6월 제2차 협상 개최후 중단	북중미 시장 교두보
	G C C (6개국)	08.7월 협상 개시, 09.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MERCOSUR (4개국)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 완료(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	BRICs국가, 자원부국

(4건, 11개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완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중미 (5개국)	10.10월 공동연구 개시, 11.4월 공동연구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 12.4월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한-ASEANFTA Upgrade, 자원부 국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www.fta.go.kr).

제3장 한국의 FTA 지원정책 분석

제1절 FTA 활용 지원정책

우리나라는 거대교역권과의 FTA를 통해 FTA네트워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각 분야의 산업 및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와 우려를 갖게 만들었다. FTA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FTA의 활용도를 재고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사업과 지원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3장에는 정부의 FTA 지원정책중 FTA활용 지원정책과 FTA 국내지원대책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FTA 활용 정보제공

가. FTA 포털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FTA활용 지원센터⁸⁾ 등 각 기관에서 FTA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며 협정국별 관세율, 원산지정보, 검증절차 및 시장정보제공 등 다양한 FTA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밀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FTA 1380 콜센터⁹⁾를 운영하며 FTA정보와 문의사항 등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무역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FTA 컨설팅 및 설명회 운영

정부에서는 FTA활용 역량 부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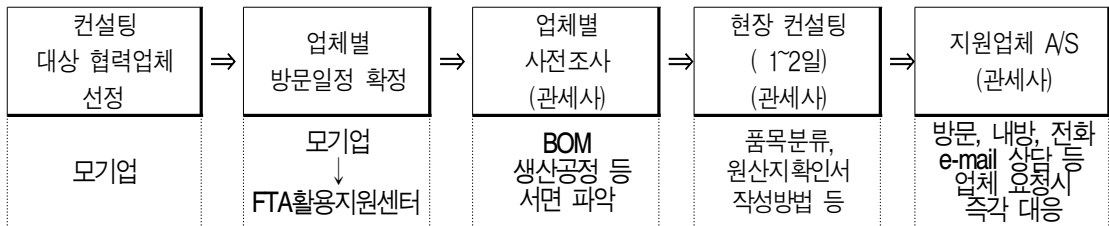
8)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서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역에 FTA활용 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9)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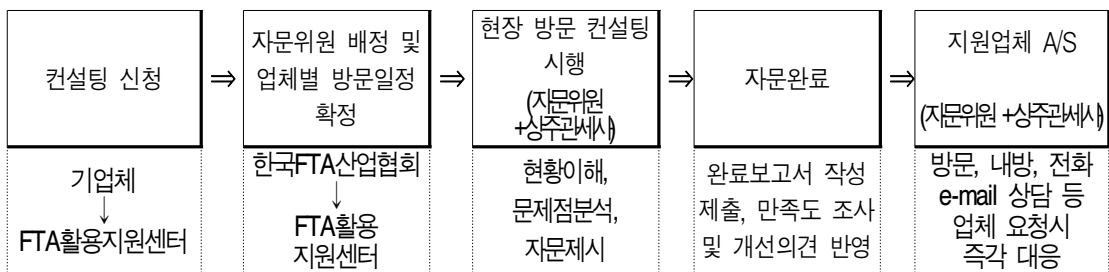
에 관세사를 파견하여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FTA수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FTA현장 방문 컨설팅, 수출 및 중견기업 1차 협력사 FTA 현장 컨설팅, FTA 전문 컨설턴트 수출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 FTA 활용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의 FTA 활용 및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을 지원해 FTA 관세혜택 향유 및 FTA 발효지역으로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등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표 3-1> FTA활용 컨설팅 추진 절차

- 수출기업 및 중견기업 1차 협력사 FTA컨설팅 절차



- FTA 전문 컨설턴트 수출자문 컨설팅



자료 : 광주지역 FTA활용 지원센터 내부자료

각 지역 FTA활용 지원센터에서는 FTA 원산지 관리 교육, 원재료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요건 설명, 모기업 원산지 관리시스템으로 원산지정보 입력방법 지도,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지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품목수가 많아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업체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관세사를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를 모기업과 상의하여 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후

속 피드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내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 출신 무역은퇴인력 FTA 무역전문가, 산업부(前기재부) 양성, (사)한국FTA산업협회 소속 컨설턴트 등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FTA전문 컨설턴트 수출자문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FTA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활용지원을 위해 FTA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FTA의 체계적인 대응과 활용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표 3-2> 2013년 광주·전남지역 FTA설명회 및 간담회

주요내용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사후검증 대응 설명회 개최 : 4회 ○ FTA활용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 2회 ○ 찾아가는 FTA 설명회 개최 : 2회 ○ 유관기관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 2회 ○ FTA관련국 경제협·단체 간담회 개최 : 4회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전략 설명회(1회) ○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설명회(1회) ○ FTA 활용 설명회(1회) ○ 한·중 FTA 활용전략 설명회(1회)

자료 : 광주, 전남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다. FTA 활용 매뉴얼배포

FTA 인식확산 및 각종 FTA활용 지원사업 홍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 FTA활용 매뉴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기업, 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또한 FTA와 관련하여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FTA 활용실태와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하고 정부 유관기관 지원사업의 효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FTA관련 조사 연구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에서는 FTA 종합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수요조사, 산업체 맞춤형 FTA 인력양성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파악된 지역 기업의 FTA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FTA 지원사업 수요 기반의 사업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표 3-3〉 2013년 광주·전남지역 FTA자료 발간 현황

주요 내용	
자료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홍보 브로슈어 제작 ○ 언론사 보도자료 및 방송보도 ○ FTA 칼럼/특집기사 게재 ○ 센터 지원사업 안내(홍보) 설명회 ○ 2013 국제광산업 전시회 센터 홍보 부스 운영 ○ '함께하는 FTA'(산업부 발간) 센터탐방 코너 게재 ○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 광주지역 FTA활용정보 소식지 뉴스레터 구축·운영
수요 조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TA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3. 11 ~ 3. 30 ○ 조사대상 : 광주지역 수출입기업 800개 ○ 조사방법 : 우편조사 2) FTA 실무인력 채용 희망기업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4. 17 ~ 4. 30 ○ 조사대상 : 광주지역 수출입기업 723개 ○ 조사방법 : 우편 및 팩스, 이메일 3) 지역 수출입(협력)기업의 FTA 활용실태 및 사업지원 수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간 : 10. 30(수) ~ 11. 14(목) ○ 조사대상 : 광주지역 수출입기업 및 협력업체 900개 ○ 조사방법 :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자료 : 광주, 전남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2. FTA 활용 기업지원

가. FTA 기업지원

첫째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으로 상품과 서비스 업종(단,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센터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FTA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확실시 될 시에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

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로 기술협력 및 R&D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확장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 인력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 부터 각종 해외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사업 및 투자 자금지원, 해외사업활화자금지원 등 다양한 자금금융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분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외국정부의 건설 등 입찰참여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제공, 외교통상부 해외입찰정보, 코트라 해외입찰정보 서비스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방법이 제공된다.

나. FTA 활용 수출지원

FTA컨설팅 이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협회, KOTRA 등 FTA활용기업 종합수출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및 수출금융지원 등을 수출지원기관과 공동 제공하는 단계별 맞춤형사업이다. 무역실무역량 단계별 연수, 환율, 원자재 시황 휴대폰 알림서비스 등 안내자료 제공,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해외바이어거래알선, 상담회 참가지원 등), 통번역서비스 제공 등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FTA 활용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연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온라인 해외 마케팅 등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6개 지역에서 연2회 수출금융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FTA활용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접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외국의 덤핑,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또는 수입금지 등으로 인해 국내 산

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로 무역위원회에서 무역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국, 호주, 캐나다 등에서 처음 이를 자국의 국내법에 도입하였으며 이후 GATT 및 WTO협정을 통하여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바, 특히 WTO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무역구제에 대한 국제규범들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니와, 우리나라는 나아가 이들 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이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¹⁰⁾(약칭 ‘산업피해구제법’)』 및 『관세법』 등 국내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현재 덤핑방지관세제도와 상계관세제도 그리고 세이프가드제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과 같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와 WTO협정과 같이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는 교역상대국의 법령·관행·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위반 조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 3-4〉 우리나라 무역구제 제도

구분	근거규정	
	국내법	국제규범
반덤핑관세제도	-관세법 -산업피해 구제법	-GATT 제6조①항, ②항 -WTO 반덤핑협정
상계관세제도		-GATT 제6조③항, 제16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세이프가드제도		-GATT 제19조WTO 세이프가드협정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산업피해 구제법	없음
국제무역규범위반조사제도		없음

자료 :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무역거래자 상호간 또는 무역거래자와 외국 업체 간에 물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도와 드리는 절차로 분쟁해결절차가 있으며 이는 대한상사중재원 무역분쟁조정에서 해결 할 수 있다.

3. FTA 활용 교육지원

가.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FTA활용 실무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FTA활용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KOTRA,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청,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의 기관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대응 및 원산지 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5회), FTA 종합실무교육(3회), FTA원산지 검증대응교육(3회), 무역실무 교육(4회), FTA 및 무역실무 온라인 교육(11개과정) 등 총 16회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수출기업의 협정별, 산업별, 지역별 FTA활용 수요와 수출비중 등을 반영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대학(대학원)전문 과정 운영

FTA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대학 FTA활용 강좌, FTA비즈니스 석사과정 개설, FTA컨설턴트 양성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FTA 전문 인력 부족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대학 내 상경계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활용강좌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과 FTA인력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FTA 활용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FTA관련 대학원¹¹⁾을 선정하여 2017년까지 지원할 계획에 있다. 2014년 현재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조선대, 부경대, 충남대, 경북대에서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조선대학교에서는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관·학 협력체계 하에서의 지역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지식교육과 실습교육의 병행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FTA활용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총 15주(45시간)에 걸쳐 FTA와 세

11) 중소기업의 FTA활용 비즈니스전략과 정부의 FTA활용 정책을 지원할 강사, 컨설턴트 및 연구원 등 FTA전문가 양성을 위해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과 강의프로그램 선정해 '13년~17년(5년간) 지원하며 '13년 정부예산안 650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석사과정을 개설 및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대학원의 FTA활용 비즈니스 교육과정 운영비로 석사과정당 1억원 내외 지원(총 학사과정 운영비의 50%상당)하며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음

계경제, FTA의 이해, 한국 FTA의 로드맵, FTA 체결국별 시장현황 및 진출전략, FTA 활용실무, FTA 현장견학, FTA 수출입시물레이션 등의 일곱 가지과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FTA인력양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원산지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교육 비용 3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2014년부터 교육비용 부담이 없어지면서 정기적으로 자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는 관련 교육을 총 5회 실시하여 2013년 말 195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지역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제2절 FTA 활용 국내지원대책

정부는 FTA체결로 인해 농산물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인들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 확충 사업으로 농업시설의 현대화, 핵심인프라 구축, 유통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 직접피해보전

가. 농어업인 피해보전

1) 피해보전직불금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문을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피해보전 직불금 제도가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을 근거로 하여 당해년 시장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일 경우, 발동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90%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대상품목 선정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으로 발동 기준 90%피해보전 비율 90%로 하며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 5백만을 지원하며 운용기간 FTA 발효 후 10년으로 하고 있다.

2) 폐업지원금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하여 축산, 과수, 시설원예 등의 품목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것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순수이익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농산

물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축산·과수·시설원예 등의 품목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수익 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여 대상상품목 선정방식은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을 갖춘 품목 가운데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품목으로 하며 지원금 산정방식은 순수익 액의 3년분 (순수익=조수입-경영비-자가노력비-토지·자본용역비)으로 하며 FTA 발효 후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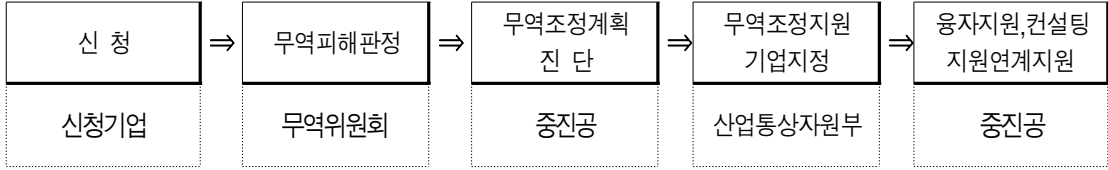
나.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회복 및 무역조정지원 도모하는 지원정책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도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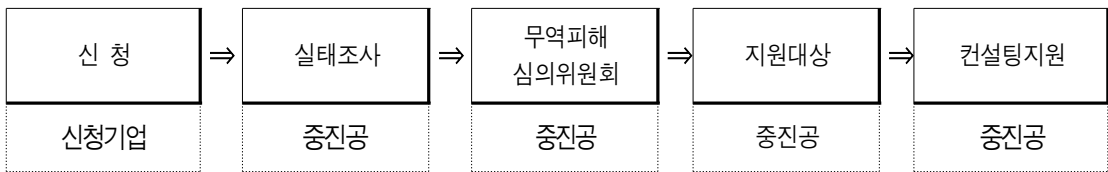
융자지원 지원규모는 95억원이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융자지원범위는 융자지원 범위 시설자금으로 생산 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차감(기준금리) 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되고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은 5억원)이다.

<표 3-5>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절차

- 무역조정지원(융자컨설팅) 지원절차



-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절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부자료.

컨설팅지원규모는 4억원이며 '무역조정지원 컨설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컨설팅)'을 통합운영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 컨설팅) 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으로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고, 중진공 심의위원회로부터 상담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무역조정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컨설팅비용 지원으로 업체당 4,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 근로자고용안전지원

FTA에 따른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능력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확충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현행 고용안정망을 최대한 활용하되 FTA 신속지원팀 운영 등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직 전·후 단계별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지역 단위에서 고용·능력개발 부문의 노사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에서는 FTA 신속지원팀을 운영하여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

FTA 신속지원팀」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할 경우와 경영상 해고 계획의 신고시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어업(4인이하)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 수단 미흡한 경우 농어민의 경우 농특회계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근로자 수당지원금 등 능력개발 지원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실직 단계와 실직후 단계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실직전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임금의 최대 3/4을 1년간 지원(현행 최대 2/3)하고 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직지원제도 활성화로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원(현행 2/3~3/4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전직지원서비스와 재직자 훈련프로그램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능력개발을 통한 원활한 전직을 지원하고 있다. 실직단계에서는 실직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FTA 신속지원팀의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일자리와 함께 정부 제공 일자리 정보까지 한곳에 모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 시스템(Work-net) 보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실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훈련연장급여 제도 개선, 거점대학 등을 활용한 고품격 훈련 강화, FTA 체결 국가 등으로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해외취업 지원체제에 대한 재편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 경쟁력 강화

직접적 피해보전 대책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 및 폐업지원제도를 운용하는 한편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융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6〉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분야	내 용
농업	경영규모 확대,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브랜드 확대를 통한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축산분야	축산물 생산단계 경쟁력 강화
	국산 축산물 홍보 강화와 소비촉진 지원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실현을 통한 축산업의 장기적 발전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축수송 특장차량 구입비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진 지역 확대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지원
식량·원예·식품	수산분야물개방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추진
	직접적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 지원
	우수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생산·유통 조직을 규모화·조직화
수산분야	원양선사가 출자 등으로 원양어업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규모화·조직화
	원양어선설비와 양식시설 현대화
	수산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토속어류산업화센터
	맞춤형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수산물 대량 양성기반 구축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를 개발하는 Golden Seel 프로젝트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시설현대화 지원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 등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사업으로 기술개발확대, 고품질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경영규모 확대,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 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분야에는 축산물 생산단계 경쟁력 강화, 국산 축산물 홍보 강화와 소비촉진 지원, 친환경 축산실현을 통한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지원 등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축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및 기술개발, 농업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 확대를 통한 농가조직화 및 규모화,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지원, 음식점 원산표시제 강화 등 농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 소득기반 확충

농업외 다양한 산업공간과 국민 생활공간으로 조성키 위한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기반 확충, 신규 취농인력의 성공적 영농 정착과 전문 농업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체계 구축 사업으로는 농업인의 농지출자를 통한 개발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학자금 융자지원, 비과세부업소득 범위 확대, 밭농업직불제 도입, 수산직불제 도입, 임차농 보호 등의 지원 사업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원마을 조성지원확대, 농촌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 농촌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체계 구축 등 농어업 산업 및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으며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확충,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확대,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표 3-7> 소득기반 확충 지원방안

분야	내 용
농축산	농업인의 농지출자를 통한 개발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발농업 직불제 도입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농촌지역 산업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체계 구축 전원마을 조성 지원과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신 활력 사업 2단계 추진 도농교류 촉진, 도시민 농촌 정주지원 토털서비스, 농촌체험마을 등 농어촌 관광 활성화
수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통해 어가경영 안정화 환경 친화적 부표 보급,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추진 등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집해장 구축확대 등으로 환경 개선 업인이 공동체를 결성해 생산·소득증대, 어장환경개선을 실천, 자원관리어업 육성 바다 숲·바다목장 조성, 수산종모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 /어장환경 구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4장 FAT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제1절 계층적 의사결정 모형 설정

1. AHP기법의 개념과 우선순위 평가방법

가. AHP기법의 개념

AHP기법은 다양한 목적(multiple objectives)을 고려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토마스 사태(Tomas L. Saaty, 1977)¹²⁾가 고안해 낸 방법이다. AHP기법의 특징은 평가자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또는 비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AHP가 근거로 하고 있는 수학적 이론이 명쾌하고, 실제적용이 매우 간편하며, 그리고 활용의 대상이 다양하다는 실용적인 특징도 갖고 있어, 현재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그 주제와 상관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토마스 사태(Tomas L. Saaty, 1990)¹³⁾는 계층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자연적(natural)인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구조화해서 한 단계씩 생각해 갈 필요가 있다. HP이론은 하나로 통합된 방법론 안에서 원소들의 일대일비교(airwise comparison)를 통해 하위방향으로의 분화분석과 퍼지집합을 이루는 원소들의 집단화를 통해 재구성된 상위방향으로의 종합적 관측이 가능하다.¹⁴⁾ 또한 AHP가 하나의 집단에 의해 사용될 경우, 여러 사람들의 판단결과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기하평균(geometric mean)이 적용된다.

12) Tomas L. Saaty (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Vol. 15, Issue 3, pp. 234-281.

13) Tomas L. Saaty (1990), "An Exposition of the HP in Reply to the Paper "Remarks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 36, No. 3, pp. 259-268.

14) 이성호, 남과우 (1999), "GIS환경에서의 공간의사결정에 관한 연구-퍼지집합과 HP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4권, 제1호, pp. 217-231.

나. AHP의 장·단점

AHP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무게 등의 객관적인 지표는 물론 만족도나 선호도와 같은 주관적인 견해에 대한 측정치를 대상으로 AHP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서열화 기법들과 비교하여 AHP의 장점은 대안의 각 속성들을 비교하는데 있으며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선택의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데 있다.

〈표 4-1〉 AHP기법의 장점

장 점	내 용
단위(unity)	비구 조화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고 적응력이 강한 모델이다.
과정의 반복 (process repetition)	문제의 정의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며, 반복을 통해 판단과 이해를 수정하게 해준다.
판단의 합의 (judgement and consensus)	합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판단으로부터의 대표적인 결과를 종합한다.
교환(tradeoffs)	시스템 구성요소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통하여 목표에 근거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해준다.
종합(synthesis)	각 대안의 종합된 최종 수정치를 제공해 준다.
일관성(consistency)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판단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복잡성(complexity)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역적 접근 방법과 시스템적 접근방법을 통합시킨 모델이다.
종속성(interdependence)	시스템의 구성요소들간 종속성 문제를 다룬다. 선형적 사고를 고수하지 않는다.
계층적구성 (hierarchic structuring)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상이한 레벨로 분류하고 각 레벨에 있는 유사요소끼리 그룹핑하는 인간의 자연적인 사고과정을 반영한다.
측정(measurement)	무형의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준다.

자료 : 조근태, 홍순옥, 권철신 (2003),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p. 26 재편집.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석적 계층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생성원리의 이론적, 개념적 토대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AHP를 적용하는 과정과 AHP를 통해 얻어진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¹⁵⁾

15) 김윤주, 심준섭 (2007), "가중치 추출기법의 비교 AHP, JA, Swing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다. 우선순위 평가방법

집단적 판단의 평균치가 행렬 내에서 일대일 비교의 역수조건(reciprocal proper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하평균이 필요하다.¹⁶⁾ AHP기법은 종합적 목표(overall goal)를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들(criteria)의 상대적 가중치와 각 기준에 있어서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한 뒤, 이들을 곱한 평점의 합을 비교하여 대안들 간의 종합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¹⁷⁾

1) 의사결정문제의 설정 및 계층화

의사결정문제를 계층화하기 위하여 먼저 종합적 목표마디를 최상위계층에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마디들을 둘째 계층에 둔 뒤 목표마디와 가지로 연결한다. 그리고 항목 간에 독립성이 유지되고 상위항목에 대한 하위항목의 종속성이 확보되며, 처리가능한 항목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호배타성, 완전결합성, 처리성이라는 평가기준선정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다만 평가기준과 대안이 늘어나면 쌍대비교를 해야 하는 질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및 대안을 최소로 설정하여야 한다.¹⁸⁾

2) 의사결정문제의 쌍대비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준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기준씩 쌍대비교를 한다. 쌍대비교의 결과는 표 또는 행렬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척도는 다음 <표 3-2>에 제시된 바와 같은 9점 척도를 사용한다. 물론 9점 척도 외에 다른 척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Harker and Vargas(1987), Saaty(1980)에 의해 수행된 광범위한 실질적 연구에서 9점 척도가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¹⁹⁾

제21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pp. 19-20.

16) J. Aczél and T.L. Saaty (1983), "Procedures for Synthesizing Ratio Judgement,"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Vol. 27, Issue 1, pp. 93-102.

17) 모수원, 김창범 (2012), "AHP와 퍼지 AHP를 이용한 국가별 FTA에 따른 산업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pp. 1827-1842.

18) 김태완, 김철욱, 강양수 (2010), "계층분석과정(AHP)에 의한 지역농업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창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농지」, 제22권, 제1호, pp. 8-14.

〈표 4-2〉 AHP기법에서 사용되는 척도

수치값	정 의	설 명
1	동등하게 중요 (equal)	비교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상위단계의 목표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약간 중요 (moderate)	경험이나 판단으로 볼 때 한 가지의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약간 더 중요하게 상위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5	매우 중요 (strong)	경험이나 판단으로 볼 때 한 가지의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매우 필수적이거나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다.
7	실증된 중요 (very strong)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증적으로 다른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입증된 경우
9	극히 중요 (extreme)	실증적으로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가장 강한 결정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경우
2, 4, 6, 8	위의 척도들의 중간 값 (compromise)	위 척도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중요도
위 숫자들의 역수	1, 1/2, ..., 1/8, 1/9	요소 a 가 요소 β 에 대해 위의 척도 중 하나인 n 값을 가질때 요소 β 는 요소 a 에 대해 $1/n$ 의 중요도를 갖는다.

자료 : Thomas L. Saaty and Luis G. Vargas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Applications in Business Energy, Health, and Transportation*, Boston: Kluwer-Nijhoff. Reprinted in Paperback (1991), Pittsburgh: RWS Publications, pp. 1-358.

쌍대비교행렬 A 는 다음과 같이 행렬의 대각을 중심으로 역수의 형태를 취한다.

$$A = \begin{pmatrix} 1 & a_{12} & a_{13} & \cdots & a_{1n} \\ a_{21} & 1 & a_{23} & \cdots & a_{2n} \\ a_{31} & a_{32} & 1 & \cdots & a_{3n} \\ \vdots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a_{n1} & a_{n2} & a_{n3} & \cdots & 1 \end{pmatrix} \quad \text{여기서 } a_{ij} = \frac{1}{a_{ji}} \text{ 이다.} \quad (\text{식 4-1})$$

19) 김영문, 채수원 (1996), "관광지선택에 있어서 AHP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0권, 제1호, pp. 63-81.

3) 가중치 산출 및 일관성 측정

기준 또는 대안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쌍대비교하여 얻은 행렬을 합성하여 벡터로 표현해야 한다. 먼저 쌍대비교 행렬을 각 열 원소의 합이 1이 되도록 표준화한 뒤, 각 행 원소 값들의 평균을 구하여 상대적 가중치 벡터를 만든다.

비교행렬 A의 원소 a_{ij} 는 요소 i 와 요소 j 두 요소의 가중치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_{ij} = \frac{w_i}{w_j} \quad (i, j = 1 \cdots n) \quad (\text{식 4-2})$$

(식 3-2)를 이용하여 (식 3-1)의 쌍대비교행렬로 (식 3-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begin{pmatrix} w_1/w_1 & w_1/w_2 & w_1/w_3 & \cdots & w_1/w_n \\ w_2/w_1 & w_2/w_2 & w_2/w_3 & \cdots & w_2/w_n \\ w_3/w_1 & w_3/w_2 & w_3/w_3 & \cdots & w_3/w_n \\ \vdots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w_n/w_1 & w_n/w_2 & w_n/w_3 & \cdots & w_n/w_n \end{pmatrix} \quad (\text{식 4-3})$$

또한 (식 3-3)의 행렬 A에 가중치 벡터 $w = [w_1, w_2, w_3, \dots, w_n]$ 을 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_w = {}_n W \quad (\text{식 4-4})$$

여기서 n 은 A의 고유 값이고 W 는 A의 고유벡터이다. 그러나 쌍대비교행렬에서 응답자가 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성에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쌍대비교행렬의 정합성이 낮게 된다. 따라서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이용하여 쌍대비교에 의한 가중치가 일관성을 갖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일관성지수와 일관성비율은 다음의 (식 3-5)에 의해 구할 수 있다.

$$CI = \frac{\lambda_{\max} - n}{n - 1} \quad (\text{식 4-5}) \quad \quad CR = \frac{CI}{RI} \quad (\text{식 4-6})$$

여기서 λ_{max} 는 최대고유값(principal eigenvalue)이며, RI(random index, RI)는 무작위 지수이다. CI는 응답자의 응답이 일관될수록 작은 값을 갖는다. 일관성 비율이 0.1(10%) 이하이면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2. 자료수집 및 계층분석구조 설정

가. 분석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FTA 체결에 따른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AHP 분석의 특성상 수량보다 설문 목적에 부합되는 정책이해관련자(policy stakeholder)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정책이해관련자들이란 문제 해결 방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로 정책결정 및 실시에 영향을 주는 사람, 채택된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 해당 정책문제에 이해를 갖는 사람, 정책문제에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²⁰⁾

조사표본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4-3>과 같이 광주·전남 소재 무역학 관련 전공교수, 관세청 공무원 및 FTA 관련기관 재직자, 제조 및 서비스업 임직원, 농·수·축산 관련업 임직원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조사표본 및 집단의 선정은 ‘유의표출(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판단과 시간과 비용의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대상인원에 대한 응답획득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기준으로 면접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으며, 실제 면접을 수락한 응답자는 31명으로 응답률은 62.0%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2일이 소요되었다.

20) 나기산 (1992), "전략적(戰略的) 상정(想定) 표출화(表出化) 및 조사(調査)," 「국방연구」, 제35권, 제1호, pp. 175-197.

〈표 4-3〉 조사표본 집단 및 인원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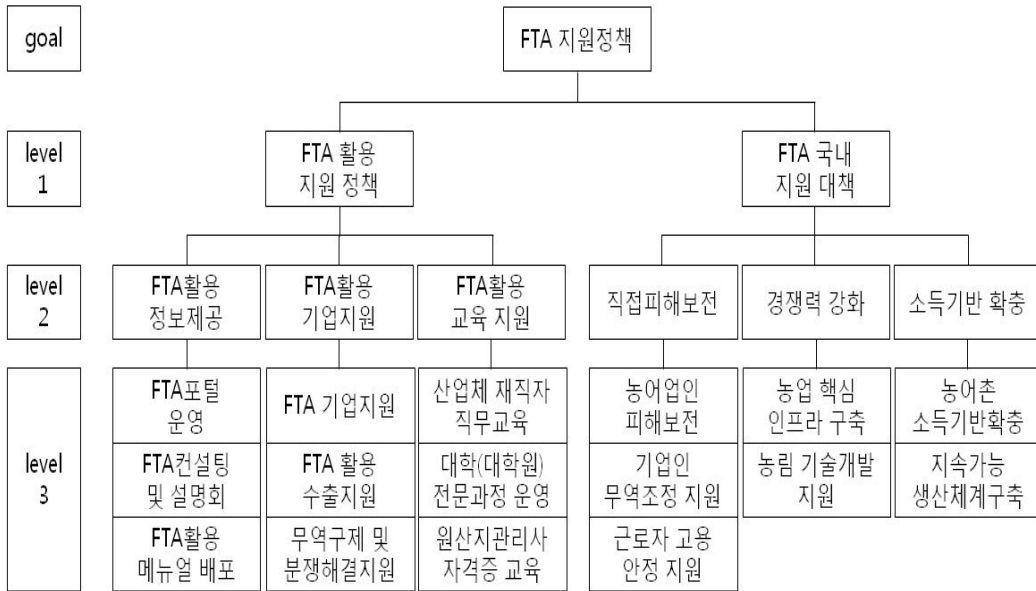
집 단	대 상	면접예정 인원(명)	면접 실시 인원(명)	응답률(%)
대학교수	- 광주·전남 소재 대학 무역학 관련 전공교수	10	7	70.0
공무원 및 FTA 관련기관 재직자	- 광주전라본부세관 - 광주상공회의소 - 광주·전남 FTA활용 지원센터 -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	10	8	80.0
제조 및 서비스업 임직원	- 광주·전남 소재 제조 및 서비 스업체 임직원	20	11	55.0
농·수·축산 관련업 임직원	- 광주·전남 소재 농·수·축산 가 공업체 임직원	10	5	50.0
합 계		50	31	62.0

나. 평가항목 및 계층설계

본 연구의 제3장에서 고찰한 우리나라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 <그림 4-1>과 같이 FTA 지원정책의 계층분석구조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상위레벨(goal)은 FTA를 통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이다. 또한 정부의 FTA 지원정책은 크게 FTA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FTA 활용 지원정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FTA 국내 지원 대책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1> FTA 지원정책의 계층분석구조



1) FTA 활용 지원정책(Level 1)

FTA 활용 지원정책은 다시 FTA 활용 정보제공, FTA 활용 기업지원, FTA 활용 교육 지원으로 세분된다(Level 2).

여기서 FTA 활용 정보제공은 ① 정부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포털을 운용하여 협정국별 관세율, 원산지정보, 검증절차 및 시장정보 제공 ②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FTA 컨설팅 지원 및 설명회 개최 ③ 협정별 원산지 관리 매뉴얼, FTA 활용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집, 사후검증 대응 등의 FTA 활용 매뉴얼 배포로 구분하였다.

또한 FTA 활용 기업지원은 ①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생산이 급감한 상품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FT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방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FTA 기업지원 ② FTA 컨설팅 이수업체를 중심으로 한 종합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FTA 선도 기업 육성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FTA 활

용 수출지원 ③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또는 수입규제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지원, 무역거래자 상호간의 무역분쟁조정 및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등의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FTA 활용 교육지원은 ① 기업 FTA 활용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기업 FTA 원산지관리 및 통관, FTA-PASS 활용교육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 재직자 FTA 활용 직무교육과 ② 미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 및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 등의 대학(대학원) 전문과정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사업 ③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담당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2) FTA 국내 지원대책(Level 1)

FTA 국내 지원 대책은 다시 직접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으로 세분된다 (Level 2). 여기서 직접피해보전은 ①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하는 농·어업인 피해보전 ②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운전자금의 융자 및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③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으로 구분된다.

또한 경쟁력 강화는 ①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 현대화 지원, 대규모 산지를 중심의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 및 소규모 농공단지 중심의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발작물, 축산) 육성의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②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 육성, 생명공학 기술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의 농림 기술개발 지원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소득기반 확충은 ① 전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발농업 직불제 도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농어촌 관광활성화 지원사업등의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과 ②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환경친화적

어구 보급,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및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등의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였다.

3.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계층분석구조에 기초하여 다음 <표 4-4>와 같이 조사의 취지와 문의처를 밝힌 표제지, 기본개념 및 설문응답 방법,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본 설문문항 및 자료의 분석에 도움이 되는 기타 사항의 4개 범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평가기준 및 대안의 중요도를 묻는 문항들은 이해관련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문항으로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 4-4> 설문지의 구성 및 문항

구 분	주요내용	설문문항
표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의 취지와 문의처 	
기본개념 및 설문응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지원정책 계층구조 모형 및 개념 ▪ 상대적 중요도의 기준 및 설문응답 방법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지원정책 VS FTA 국내 지원대책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지원정책 관련 하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활용 정보제공 관련 핵심사업 - FTA 활용 기업지원 관련 핵심사업 - FTA 활용 교육지원 관련 핵심사업 	2-1, 2-2, 2-3 2-1-1, 2-1-2, 2-1-3 2-2-1, 2-2-2, 2-2-3 2-3-1, 2-3-2, 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국내 지원대책 관련 하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피해보전 관련 핵심사업 - 경쟁력 강화 관련 핵심사업 - 소득기반 확충 관련 핵심사업 	3-1, 3-2, 3-3 3-2-1, 3-1-2, 3-1-3 3-2-1 3-3-1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직군 ▪ 정책 건의 사항 	

제2절 FTA 지원정책의 중요도 산출결과

1. 일관성 검증

AHP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 요소들의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상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C.R.값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C.R.값이 0.1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 일관성은 특정 기준에 대한 비교대상이 3개 이상일 경우 검증이 가능하며, 비교행렬의 주고유벡터를 활용한 1:1 비교결과의 통합과정에서 비일관성 지수를 도출해 주며, 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의 합리성과 논리성을 높일 수 있다.²¹⁾

토마스 사티(Tomas L. Saaty, 1980²²⁾)는 일관성비율의 값이 0.1이하 이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이하일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으나, 0.2를 초과하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 4-5>와 같이 최초 조사표본인 31명의 설문응답에 대한 일관성 비율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R.)이 0.2를 초과한 6명을 본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25명의 설문응답을 최종 가중치 계산에 이용하였다. 한편 분석에 사용된 통계패키지는 Ecpert Choice 2000(150 Group User)이다.

21) 손용정 (2012),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평가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통상정보연구」, 제 14권, 제1호, p. 310.

22) Tomas L. Saaty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표 4-5> 조사표본 집단의 일관성 비율 검증 결과

집 단	번호	가중치		일관성 비율 (C.R.)	
		FTA 활용 지원 정책	FTA 국내 지원 대책	최초	최종
대학교수 (7명)	1	0.750	0.250	0.07	0.07
	2	0.833	0.167	0.15	0.15
	3	0.875	0.125	0.04	0.04
	4	0.889	0.111	0.39	제외
	5	0.750	0.250	0.09	0.09
	6	0.667	0.333	0.10	0.10
	7	0.667	0.333	0.06	0.06
	산술평균	0.780	0.220	0.13	0.09
관세공무원 및 FTA 관련 기관 (8명)	1	0.800	0.200	0.08	0.08
	2	0.250	0.750	0.17	0.17
	3	0.875	0.125	0.36	제외
	4	0.500	0.500	0.13	0.13
	5	0.125	0.875	0.14	0.14
	6	0.250	0.750	0.17	0.17
	7	0.833	0.167	0.04	0.04
	8	0.667	0.333	0.02	0.02
	산술평균	0.54	0.46	0.14	0.11
제조 및 서비스업 (11명)	1	0.750	0.250	0.33	제외
	2	0.833	0.167	0.19	0.19
	3	0.500	0.500	0.14	0.14
	4	0.250	0.750	0.10	0.10
	5	0.500	0.500	0.04	0.04
	6	0.750	0.250	0.46	제외
	7	0.857	0.143	0.34	제외
	8	0.667	0.333	0.07	0.07
	9	0.750	0.250	0.11	0.11
	10	0.833	0.167	0.17	0.17
	11	0.833	0.167	0.15	0.15
산술평균	0.68	0.32	0.19	0.12	
농·수·축산 가공업 (5명)	1	0.333	0.667	0.09	0.09
	2	0.250	0.750	0.09	0.09
	3	0.250	0.750	0.16	0.16
	4	0.167	0.833	0.33	제외
	5	0.125	0.875	0.10	0.10
	산술평균	0.23	0.78	0.15	0.11
전체집단 평균 (31/25명)		0.59	0.41	0.16	0.11

2. FTA 지원정책의 중요도 산출

가. 전체표본 분석결과

다음 <표 4-6>은 일관성 비율(C.R.)이 0.2이하인 총 25명의 설문응답을 이용하여 현행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FTA 지원정책의 각 하부 요소별 상대적 가중치를 평균하여 표시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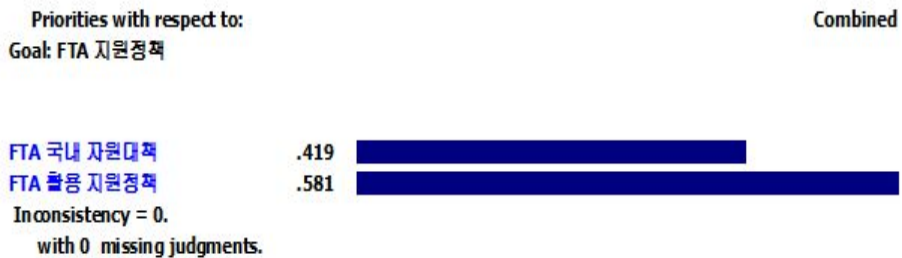
<표 4-6>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평가결과(전체표본)

정책 (Level 1)	가중치 (C.R.)	하부정책 (Level 2)	가중치 (C.R.)	핵심사업 (Level 3)	가중치	복합가중치 (전체순위)
FTA 활용 지원 정책	0.581 (0.00)	FTA 활용 정보제공	0.187 (0.00)	FTA 포털 운영	0.321	0.035 (15)
				FTA 컨설팅 및 설명회	0.448	0.049 (09)
				활용 매뉴얼 배포	0.231	0.025 (16)
		FTA 활용 기업지원	0.471 (0.00)	FTA 기업 지원	0.417	0.114 (01)
				FTA 활용 수출 지원	0.407	0.111 (02)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0.176	0.048 (11)
		FTA 활용 교육지원	0.342 (0.03)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0.455	0.091 (03)
				대학(대학원) 전문과정운영	0.352	0.070 (07)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0.192	0.038 (13)
FTA 국내 지원 대책	0.419 (0.01)	직접 피해보전	0.348 (0.00)	농·어업인 피해보전	0.379	0.048 (10)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0.331	0.042 (12)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0.291	0.037 (14)
		경쟁력 강화	0.448 (0.00)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0.416	0.063 (08)
				농림 기술 개발 지원	0.584	0.089 (04)
		소득기반 확충	0.204 (0.00)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0.503	0.071 (05)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	0.497			0.070 (06)		

전체표본에 대한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 운용에 있어 FTA 활용 지원정책(A)과 FTA 국내 지원대책(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정책이해관련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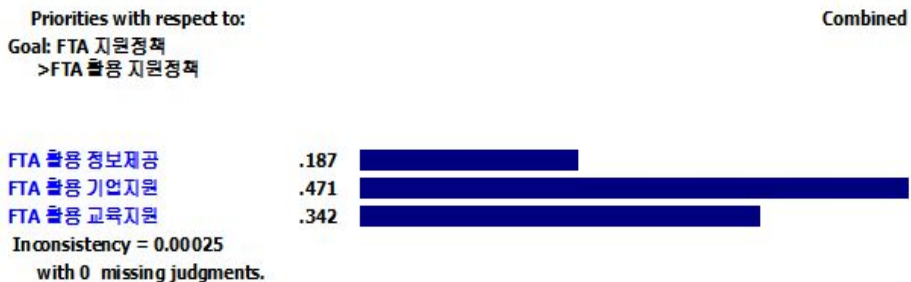
판단은 FTA 활용 지원정책(58.1%)이 FTA 국내 지원대책(41.90%)보다 더 약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 FTA 국내 지원대책 vs FTA 활용 지원정책(전체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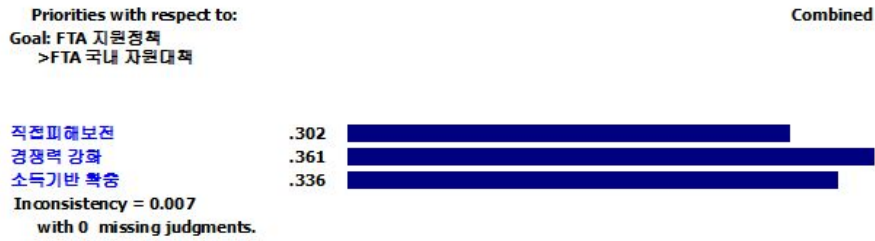
또한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 정책인 FTA 활용 정보제공, FTA 활용 기업지원 및 FTA 활용 교육지원 사이의 중요도는 FTA 활용 기업지원(47.1%)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FTA 활용 교육지원(34.2%), FTA 활용 정보제공(18.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정책별 가중치(전체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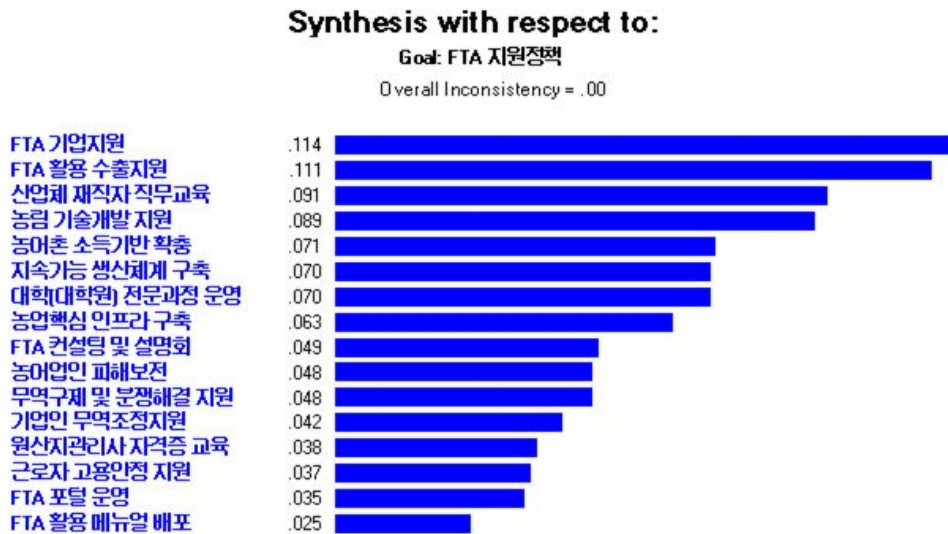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 정책인 직접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사이의 중요도는 경쟁력 강화(36.1%)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소득기반 확충(33.6%), 직접피해보전(30.2%)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4>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정책별 가중치(전체표본)



다음의 <그림 4-5>는 전체 응답자(25명)를 대상으로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핵심 사업별 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4-5> FTA 지원정책의 핵심사업별 복합가중치(전체표본)



분석결과 광주·전남지역의 FTA 정책이해관련자들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생산이 급감한 상품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FT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방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핵심으로 하고 있는 FTA 기업지원의 중요도(11.4%)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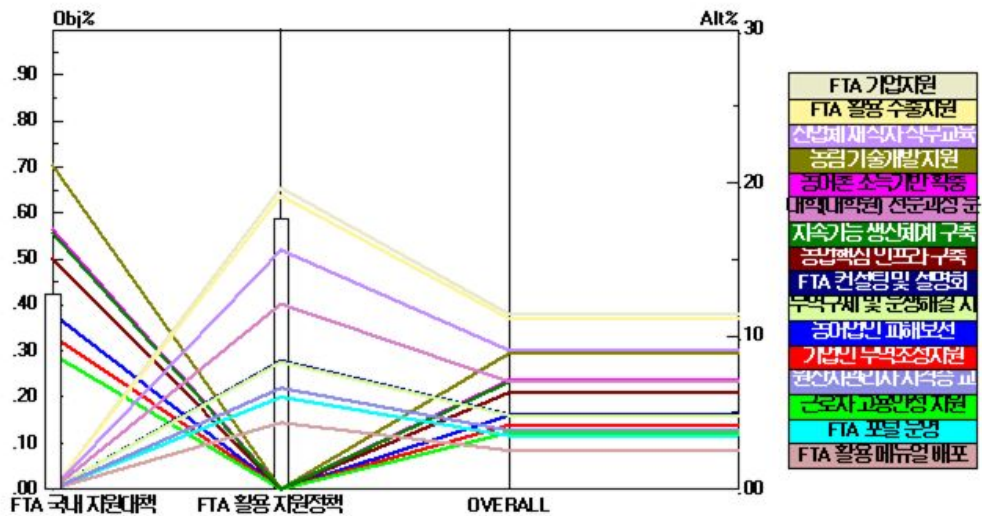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FTA 활용 수출지원(11.1%),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9.1%), 농림 기술개발

지원(8.9%),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7.1%),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7.0%), 대학(대학원) FTA 전문과정 운영(7.0%) 등의 순으로 핵심사업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반면 FTA 활용 매뉴얼 배포(0.25%), FTA 포털운영(3.5%) 및 근로자 고용안전지원 사업(3.7%)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다음 <그림 4-6>은 FTA 지원정책의 핵심사업별 민감도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그림 4-6> FTA 지원정책의 핵심사업별 민감도(전체표본)

Performance Sensitivity for nodes below: Goal: FTA 지원정책



나. 집단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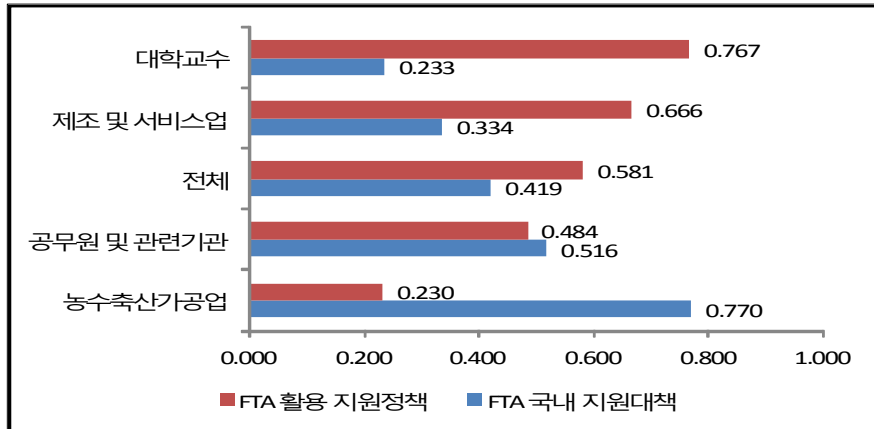
다음 <표 4-7>은 표본집단별 FTA 지원정책의 정책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의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에 표본집단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표본집단별 FTA 지원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기준 \ 조사집단	전체	대학교수	공무원 및 관련기관	제조 및 서비스업	농수축산 가공업
▪ FTA 활용 지원정책	0.581	0.767	0.484	0.666	0.230
- FTA 활용 정보제공	0.187	0.108	0.158	0.206	0.273
- FTA 활용 기업지원	0.471	0.383	0.568	0.488	0.444
- FTA 활용 교육지원	0.342	0.510	0.274	0.306	0.283
▪ FTA 국내 지원대책	0.419	0.233	0.516	0.334	0.770
- 직접피해보전	0.302	0.323	0.269	0.368	0.272
- 경쟁력 강화	0.361	0.278	0.415	0.368	0.323
- 소득기반 확충	0.336	0.399	0.316	0.264	0.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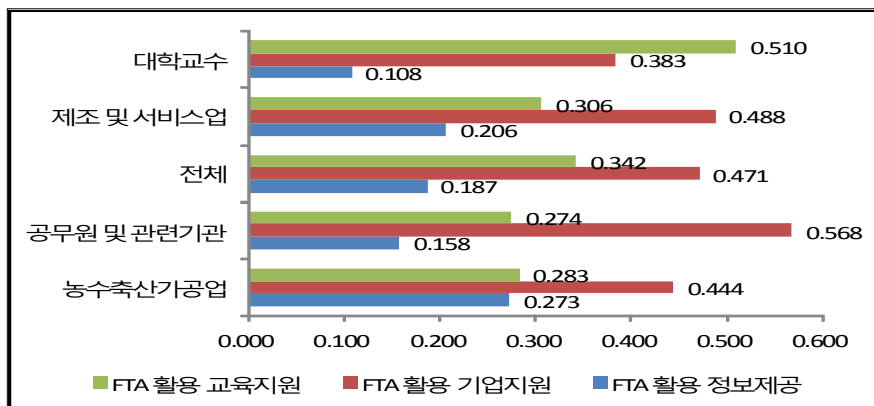
다음 <그림 4-7>에서와 같이 대학교수와 제조 및 서비스업의 응답자들은 FTA 활용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FTA 국내 지원대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재직자와 농수축산 가공업 임직원들은 FTA 국내 지원대책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FTA 활용 지원정책 vs FTA 국내 지원대책(표본집단별)



또한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정책별 중요도에서도 대학교수 집단은 FTA 활용 교육지원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 및 서비스업,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재직자, 농수축산 가공업 임직원들은 FTA 활용 기업지원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TA 활용 정보제공은 모든 표본집단에서 그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FTA 컨설팅 사업 및 설명회의 중요도가 실제로 낮기 보다는 그 전문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8>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정책별 중요도(표본집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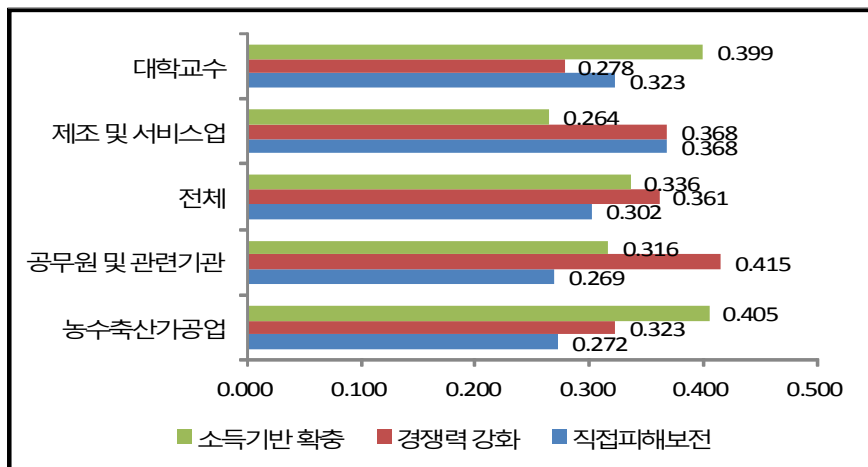


또한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정책별로는 대학교수 집단은 소득기반 확충, 직접피해보전, 경쟁력 강화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농수축산 가공업 임직원 역시 소득기

반 확충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제조 및 서비스업,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재직자들은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직접피해보전은 전체표본과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재직자, 농수축산 가공업 임직원 재직자 집단에서 그 중요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바, 이는 직접피해보전의 핵심사업인 농·어업인 대상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이 전달체계상에서 피해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하여야 하는 바, 영세 농어민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추측된다.

〈그림 4-9〉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정책별 중요도(표본집단별)



다. 분석결과 종합

조사집단 (C.R.) /명	정책 (Level 1)	가중치 (C.R.)	하부정책 (Level 2)	가중치	전체	
					복합 가중치	순위
대학교수 (0.02) / 6	FTA 활용 지원 정책	0.767 (0.01)	FTA 활용 정보제공	0.108	0.082	4
			FTA 활용 기업지원	0.383	0.293	2
			FTA 활용 교육지원	0.510	0.391	1
	FTA 국내 지원 대책	0.233 (0.06)	직접피해보전	0.323	0.075	5
			경쟁력 강화	0.278	0.065	6
			소득기반 확충	0.399	0.093	3
공무원 및 관련기관 (0.02) / 7	FTA 활용 지원 정책	0.484 (0.02)	FTA 활용 정보제공	0.158	0.077	6
			FTA 활용 기업지원	0.568	0.275	1
			FTA 활용 교육지원	0.274	0.163	3
	FTA 국내 지원 대책	0.516 (0.01)	직접피해보전	0.269	0.139	5
			경쟁력 강화	0.415	0.215	2
			소득기반 확충	0.316	0.163	3
제조 및 서비스업 (0.01) / 9	FTA 활용 지원 정책	0.666 (0.01)	FTA 활용 정보제공	0.206	0.137	3
			FTA 활용 기업지원	0.488	0.325	1
			FTA 활용 교육지원	0.306	0.204	2
	FTA 국내 지원 대책	0.334 (0.00)	직접피해보전	0.368	0.123	4
			경쟁력 강화	0.368	0.123	4
			소득기반 확충	0.264	0.088	6
농수축산 관련업 (0.03) / 4	FTA 활용 지원 정책	0.230 (0.08)	FTA 활용 정보제공	0.273	0.062	6
			FTA 활용 기업지원	0.444	0.102	4
			FTA 활용 교육지원	0.283	0.066	5
	FTA 국내 지원 대책	0.770 (0.01)	직접피해보전	0.272	0.211	3
			경쟁력 강화	0.323	0.249	2
			소득기반 확충	0.405	0.311	1
전체 (0.00)/ 26	FTA 활용 지원 정책	0.581 (0.00)	FTA 활용 정보제공	0.187	0.109	6
			FTA 활용 기업지원	0.471	0.273	1
			FTA 활용 교육지원	0.342	0.199	2
	FTA 국내 지원 대책	0.419 (0.01)	직접피해보전	0.302	0.127	5
			경쟁력 강화	0.361	0.152	3
			소득기반 확충	0.336	0.141	4

제3절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 운용에 있어 FTA 활용 지원정책과 FTA 국내 지원 대책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냐는 질문에 본 연구에서 선정한 정책이해관련자들의 판단은 FTA활용 지원정책(58.1%)이 FTA 국내 지원대책(41.90%)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 정책인 FTA 활용 정보제공, FTA 활용 기업지원 및 FTA 활용 교육지원 사이의 중요도는 FTA 활용 기업지원(47.1%)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어서 FTA 활용 교육지원(34.2%), FTA 활용 정보제공(18.7%)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그림 <4-5> FTA지원정책의 핵심사업별 복합가중치(전체표본)를 보면 FTA기업지원, FTA활용 수출지원, 산업체 재직자직무교육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표본 집단별 FTA지원정책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대학교수와 제조 및 서비스업의 응답자들은 FTA활용지원 정책의 중요도를 FTA 국내지원대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고 공무원 및 관련기관 재직자, 농수축산업 임직원들은 FTA 국내 지원대책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어, 설문 응답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이 설문결과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종합을 보면 대학교수는 FTA활용 교육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FTA활용 기업지원과 경쟁력강화, 제조 및 서비스업 종사자는 FTA활용 기업지원, 농수축산 관련업에서는 소득기반 확충에 더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는 FTA활용지원 정책의 FTA 활용 기업지원, FTA 활용 교육지원이 1, 2순위로 나타났고 FTA 국내지원 대책 중 경쟁력 강화가 3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2. FTA 지원정책에 관한 제언

가. 농어민소득지원방식의 다양성 추구

농업생산량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예산 등 자원의 재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지원방식으로 농가소득지원을 수행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성 높은 지원 수단 방식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방식이 아닌 기존의 방식을 보완하고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현재 추진 중인 방식을 확충하는 정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정부의 농업직불제도의 보완과 확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농업직불제도의 이행요건을 정비하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도 중요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농가소득 지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²³⁾ 이러한 필요성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수단의 도입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순 정부지원이 아닌 이른바 시장기반형 금융지원시스템의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농업부문의 금융지원은 일종의 정책금융에 해당한다. 유럽과 북미 등 자본시장이 발달된 지역과 국가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원마련을 통한 자금유지를 위해 펀드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가 일정기금 모태펀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농가 소득확충의 다변화를 추진할 때에는 최소한의 제도운용에 관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고시나 시행규칙 등을 활용하고 있다. 녹색펀드 투자 모범규준, 신성자동력투자 사업관리 규정 등이 이러한 예로, 고시와 규칙 등의 프레임과 틀을 활용해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과 연계한 금융상품을 이용한 제도 운용을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 다수의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금융과 관련하여 농업직불 제도 확충과 함께 금융지원 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제시하는 연구도 다수 있다.

나. 기금조성 및 재원의 확대

현행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⁴⁾ 이는 FTA 체결시에 이행지원기금을 수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기금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금은 철저한 법정주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가재정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기금 활용에 있어서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이라는 절대적인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기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FTA 체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이행지원기금의 확대는 충분히 논의되어 할것이지만 많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의 활용도 제한할 수 있다.

다. 지원제도의 효율성제고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변형된 형태의 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제도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는 운용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저학력 실업자들에 대한 세계화속에서 현실적인 직업교육의 어려움, 해고 근로자들이 원스톱센터를 방문하지만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적어 일부는 제도적인 지원 없이 재취업을 하고 있는 등 교육훈련에 대한 신뢰성과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⁵⁾

현행 무역조정지원법에서는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한

24)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 제1항 및 제2항

25) FTA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의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문제점

정보제공을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사항을 개선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정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와 최신버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의 정보제공의무를 법적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제도운영의 법적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제5장 결 론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라는 정부의 정책로드맵에 맞추어 한국은 전세계 여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통합에 따른 시장 확대와 규모의 경제효과, 무역개방을 통한 경제체질의 개선, 경제개혁의 장애요인 해소 등 다양한 FTA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급격한 정부의 FTA추진정책은 기업들이 FTA를 인지하고 충분히 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FTA추진은 자국이 원하는 데로 협정을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체결된 FTA를 누가 얼마나 잘 활용하여 상대시장을 선점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이 때문에 FTA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시급하고 국가의 명운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에는 기업의 FTA활용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FTA활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괴리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FTA인식 및 활용도 저조라는 문제를 안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해야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FTA 논문, 책자, 기타 자료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했다. 이미 FTA활용지원정책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더 중점을 두었다.

GOAL, Level 1-3단계로 나누어 FTA지원정책과 계층분석 구조를 도식화하여 FTA지원 사업을 정리하였고 이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FTA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설문 에 응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층적 분석(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로 FTA 활용지원정책에서 기업지원이 가장 높은 결과를 가져왔고 두 번째로 FTA활용수출지원, 세번째로는 FTA활용교육지원 중 재직자 직무교육 등 그 이하가 다음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5-1〉 FTA 지원정책의 정책우선순위

핵심사업	복합가중치 (우선순위)	핵심사업	복합가중 (우선순위)
FTA 기업 지원	0.114 (01)	FTA 컨설팅 및 설명회	0.049 (09)
FTA 활용 수출 지원	0.111 (02)	농·어업인 피해보전	0.048 (10)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0.091 (03)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0.048 (11)
농림 기술 개발 지원	0.089 (04)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0.042 (12)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0.071 (05)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0.038 (13)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	0.070 (06)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0.037 (14)
대학(대학원) 전문과정운영	0.070 (07)	FTA 포털 운영	0.035 (15)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0.063 (08)	활용 매뉴얼 배포	0.025 (16)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별 및 FTA 활용단계별 수준에 맞는 FTA 지원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의 FTA 지원정책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이 입증된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방향은 업종별, 활용수준별 및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FTA 활용 기업지원의 균형적 정책실시이다. 전체 표본집단 분석결과 FTA 기업지원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동 정책의 핵심사업인 FTA 기업 지원과 FTA 활용 수출지원의 중요도가 유사하게 분석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생산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FTA를 활용한 수출지원 정책이 균형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청의 FTA 활용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FTA 교육·수출활동 연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 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본격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확대이다. 전체 표본집단 분석결과 FTA 활용 교육지원의 우선순위가 2위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체 재직자 및 대학(대학원)의 FTA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배양된 FTA 전문인력이 지역에 환류될 수 있는 취업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FTA 전문인력(FTA 석사, 관세사 및 원산지관리사)을 채용할 시 고용창출지원금 등 정책지원금을 확대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FTA 컨설팅 및 설명회 내실화 추진이다. 전체 표본집단 분석결과 FTA 활용 정보제공의 우선순위가 최하위를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지원 및 설명회의 중요도가 실제로 낮기 보다는 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정책이해관계자의 인식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홍보성 단기성 컨설팅지원을 자제하고 산업별, FTA 활용수준별로 원산지인증 및 검증,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컨설팅을 내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장기적 지원정책 수립이다. 표본집단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농수축산관련업에서 조차 직접피해보전의 중요도가 예상 보다 낮게(3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낮은 직접피해보전금 지원정책보다는 FTA 취약산업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출유망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성과에도 불과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표본집단의 지역적 한계이다. 본 연구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정책이해관계자들을 광주·전남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집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체별, FTA 활용수준별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수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영문, 채수원 (1996), "관광지선택에 있어서 AHP의 활용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0권, 제1호.
- 김윤주, 심준섭 (2007), "가중치 추출기법의 비교 AHP, JA, Swing기법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태완, 김철욱, 강양수 (2010), "계층분석과정(AHP)에 의한 지역농업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창녕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제농지」, 제22권, 제1호.
- 나기산 (1992), "전략적(戰略的) 상정(想定) 표출화(表出化) 및 조사(調査)," 「국방연구」, 제35권, 제1호.
- 모수원, 김창범 (2012), "AHP와 퍼지 AHP를 이용한 국가별 FTA에 따른 산업부문의 상대적 중요도,"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 손용정 (2012), "FTA 체결에 따른 국내지원대책의 평가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 이성호, 남과우 (1999), "GIS환경에서의 공간의사결정에 관한 연구-퍼지집합과 HP이론의 활용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34권, 제1호.
- 조근태, 홍순욱, 권철신 (2003),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외국문헌>

- Aczél, J. and T.L. Saaty (1983), "Procedures for Synthesizing Ratio Judgement,"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Vol. 27, Issue 1.
- Saaty, Thomas L. and Luis G. Vargas (1982), *The Logic of Priorities: Applications in Business Energy, Health, and Transportation*, Boston: Kluwer-Nijhoff. Reprinted in Paperback (1991), Pittsburgh: RWS Publications.

Saaty, Tomas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cGraw-Hill.

Sanity, Tomas L. (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Vol. 15, Issue 3.

Sanity, Tomas L. (1990), "An Exposition of the HP in Reply to the Paper "Remarks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Management Science*, Vol. 36, No. 3.

《부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통상장원부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에 재학 중이며, “계층적 분석과정을 통한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연구”라는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지원 정책들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책별 우선순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정책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면 되며, 선생님의 고견은 오직 학문적인 자료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후 설문에 관한 의문점이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지도교수 :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경영학박사·경제학박사 김석민
010-3626-7471, ksm@chosu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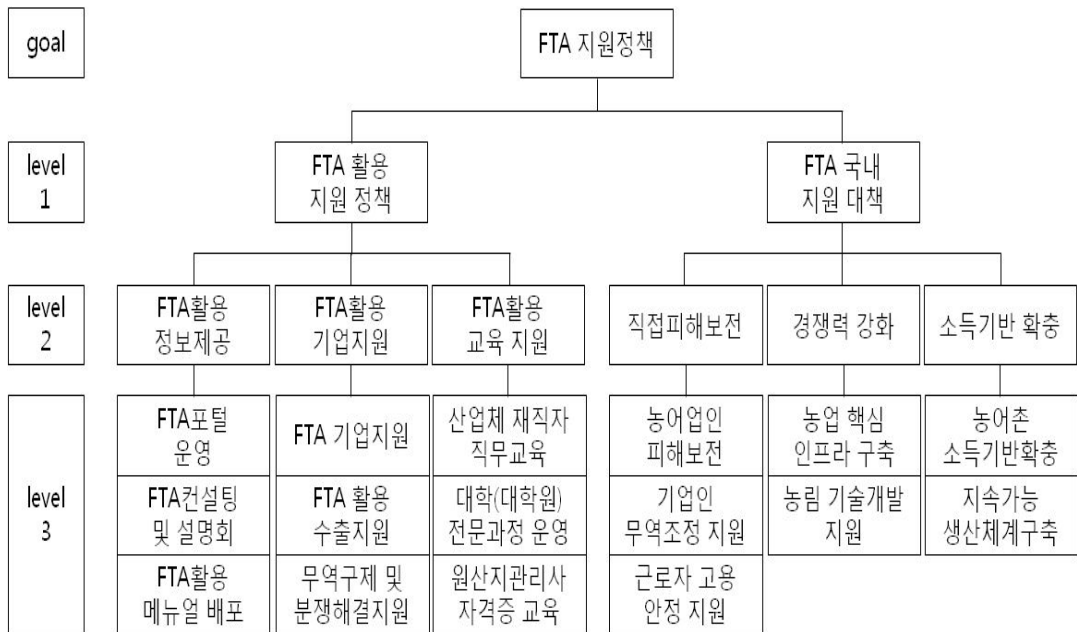
조사자 :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 비즈니스학과
석사과정 김희중
010-9944-6513, khj1633@korcham.net

I. 기본개념 및 설문응답 방법

♣ 본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FTA 지원정책의 계층구조와 각 정책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또한 측정방법의 기본개념과 표기요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FTA 지원정책 계층구조 모형 및 개념

1.1 FTA 지원정책 계층구조 모형



1.2 FTA 지원정책별 기본 개념

- Level 1 : 정부의 FTA 지원정책(goal)은 크게 FTA 활용도를 재고시키기 위한 **FTA 활용 지원정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FTA 국내 지원대책**으로 구분됩니다.
- Level 2 : **FTA 활용 지원정책**은 다시 **FTA 활용 정보제공**, **FTA 활용 기업지원**, **FTA 활용 교육지원**으로 세분됩니다.
- **FTA 활용 정보제공**은 ① 정부 관련부처 및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 포털**을 **운용**하여 협정국별 관세율, 원산지정보, 검증절차 및 시장정보 제공 ② 중소기업

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FTA 컨설팅 지원 및 설명회** 개최 ③ 협정별 원산지 관리 매뉴얼, FTA 활용 마케팅 및 비즈니스 모델 사례집, 사후검증 대응 등의 **FTA 활용 매뉴얼** 배포로 구분됩니다.

- **FTA 활용 기업지원**은 ①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생산이 급감한 상품과 서비스업체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용자·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 FTA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시장 방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FTA 기업지원** ② FTA 컨설팅 이수업체를 중심으로한 종합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FTA 선도기업 육성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의 **FTA 활용 수출지원** ③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또는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지원, 무역거래자 상호간의 무역분쟁조정 및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 등의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 **FTA 활용 교육지원**은 ① 기업 FTA 활용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기업 FTA 원산지관리 및 통관, FTA-PASS 활용교육을 중심으로 한 **산업체 재직자 FTA 활용 직무교육**과 ② 미래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FTA 강좌 지원사업 및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지원사업 등의 **대학(대학원) 전문과정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③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Level 2 : 또한 **FTA 국내 지원대책**은 다시 **직접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으로 세분됩니다.
 - **직접피해보전**은 ① 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하는 **농·어업인 피해보전** ② 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설·운전자금의 용자 및 경영·기술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③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전직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자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 등의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 **경쟁력 강화**는 ①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 현대화 지원, 대규모 산지를 중심의 산지거점유통센터 운영 및 소규모 농공단지 중

십의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발작물, 축산) 육성의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②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 육성, 생명공학 기술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및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의 **농림 기술개발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 **소득기반 확충**은 ① 전업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말농업 직불제 도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등의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과 ②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환경친화적 어구 보급,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및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등의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 구축**으로 구분됩니다.

2. 상대적 중요도의 기준 및 설문응답 방법

2.1 상대적 중요도의 기준

○ A와 B 두 평가기준의 중요도가 동일하면 1	(A = B)
○ A가 B보다 다소 중요하면 3	(A > B)
○ A가 B보다 훨씬 중요하면 5	(A >> B)
○ A가 B보다 매우 중요하면 7	(A >>> B)
○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면 9	(A >>>> B)
- 2, 4, 6, 8 등 중간 수치도 사용가능함	
- A와 B의 중요도가 반대이면 반대로 표시	

2.2 설문 응답 방법

- ♣ 설문응답의 예 : 경제정책 중 경기 활성화(A)가 물가 안정(B) 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예】 귀하는 정부의 현행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경기 활성화(A)와 물가 안정(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경기 활성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물가 안정

II. 본 설문 문항 (FTA 지원정책의 우선순위)

1. FTA 활용 지원정책 VS FTA 국내 지원대책 (Level 1)

♣ 다음의 설문은 정부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행 FTA 지원 정책(goal) 중 FTA 활용 지원정책(A)과 FTA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FTA 국내 지원대책(B)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술된 각 정책의 개념과 세부 정책을 참조하시어 귀하께서 판단하는 중요도(1~9 사이)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 운용에 있어 FTA 활용 지원정책(A)과 FTA 국내 지원대책(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FTA 활용 지원정책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국내 지원대책

- FTA 활용 지원정책 : FTA 활용 정보제공, FTA 활용 기업지원, FTA 활용 교육지원
- FTA 국내 지원대책 : 직접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2. FTA 활용 지원정책 관련 하부 정책 (Level 2)

♣ 다음의 설문은 FTA 활용 지원정책의 하부 정책인 FTA 활용 정보제공, FTA 활용 기업지원 및 FTA 활용 교육지원 사이의 중요도 및 각 정책별 핵심 사업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1】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지원정책 운용에 있어 FTA 활용 정보제공(A)과 FTA 활용 기업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FTA 활용 정보제공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활용 기업지원

- FTA 활용 정보제공 : FTA 포털 운영, FTA 컨설팅 및 설명회, FTA 활용 매뉴얼 배포
- FTA 활용 기업지원 : FTA 기업지원,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2-2】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지원정책 운용에 있어 **FTA 활용 정보제공(A)**과 **FTA 활용 교육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FTA 활용 정보제공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활용 교육지원

- FTA 활용 정보제공 : FTA 포털 운영, FTA 컨설팅 및 설명회, FTA 활용 매뉴얼 배포
- FTA 활용 교육지원 : 업체 재직자 FTA 직무교육, 대학(대학원) FTA 전문과정 운영,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2-3】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지원정책 운용에 있어 **FTA 활용 기업지원(A)**과 **FTA 활용 교육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FTA 활용 기업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활용 교육지원

- FTA 활용 기업지원 : FTA 기업지원,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무역구제 및 분쟁 해결 지원
- FTA 활용 교육지원 : 산업체 재직자 FTA 직무교육, 대학(대학원) FTA 전문과정 운영,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2-1. FTA 활용 정보제공 관련 핵심 사업 (Level 3)

♣ 다음의 설문은 FTA 활용 정보제공의 핵심 사업인 **FTA 포털 운영, FTA 컨설팅 및 설명회** 및 **FTA 활용 매뉴얼 배포**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1-1]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정보제공 핵심사업 중 **FTA 포털 운영(A)**과 **FTA 컨설팅 및 설명회(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FTA 포털 운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컨설팅 및 설명회													

- FTA 포털 운영 : 협정국별 관세율, 원산지정보, 원산지 검증절차 정보 등 제공
- FTA 컨설팅 및 설명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설명회 개최

[2-1-2]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정보제공 핵심사업 중 **FTA 포털 운영(A)**과 **FTA 활용 매뉴얼 배포(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FTA 포털 운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활용 매뉴얼 배포													

- FTA 포털 운영 : 협정국별 관세율, 원산지정보, 사후검증절차 정보 등 제공
- FTA 활용 매뉴얼 배포 : 협정별 원산지,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사후검증 매뉴얼 배포

[2-1-3]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정보제공 핵심사업 중 **FTA 컨설팅 및 설명회(A)**와 **FTA 활용 매뉴얼 배포(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FTA 컨설팅 및 설명회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활용 매뉴얼 배포		

- FTA 컨설팅 및 설명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설명회 개최
- FTA 활용 매뉴얼 배포 : 협정별 원산지,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사후검증 매뉴얼 배포

2-2. FTA 활용 기업지원 관련 핵심 사업 (Level 3)

♣ 다음의 설문은 FTA 활용 기업지원의 핵심 사업인 FTA 기업 지원, FTA 활용 수출 지원 및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2-1】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기업지원 핵심사업 중 FTA 기업 지원(A)과 FTA 활용 수출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FTA 기업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FTA 활용 수출 지원		

- FTA 기업 지원 : FTA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컨설팅) 및 국내·외 시장개척 및 방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 FTA 활용 수출 지원 : 종합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2-2-2】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기업지원 핵심사업 중 FTA 기업 지원(A)과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FTA 기업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 FTA 기업 지원 : FTA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컨설팅) 및 국내·외 시장개척 및 방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 불공정 무역행위 및 수입급증에 무역구제,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지원 등

【2-2-3】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기업지원 핵심사업 중 FTA 활용 수출기업 지원(A) 과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중요	기준(B)
FTA 활용 수출 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 FTA 활용 수출 지원 : 종합수출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 무역구제 및 분쟁해결 지원 : 불공정 무역행위 및 수입급증에 무역구제,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지원 등

2-3. FTA 활용 교육지원 관련 핵심 사업 (Level 3)

♣ 다음의 설문은 FTA 활용 교육지원의 핵심 사업인 산업체 재직자 FTA 직무 교육, 대학(대학원) FTA 전문과정 운영 지원 및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지원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3-1】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교육지원 핵심사업 중 산업체 재직자 FTA 직무 교육(A) 과 대학(대학원) FTA 전문과정 운영(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중요	기준(B)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대학(대학원) 전문과정운영		

-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 FTA 비즈니스모델,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교육, FTA-PASS 활용교육

- 대학(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 대학(대학원)의 FTA 강좌 지원을 통한 FTA 전문인력 양성

【2-3-2】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교육지원 핵심사업 중 산업체 재직자 FTA 직무교육(A)과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 산업체 재직자 직무교육 : FTA 비즈니스모델,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교육, FTA-PASS 활용교육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 각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

【2-3-3】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활용 교육지원 핵심사업 중 대학(대학원) FTA 전문과정 운영(A)과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대학(대학원) 전문과정운영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 대학(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 대학(대학원)의 FTA 강좌 지원을 통한 FTA 전문인력 양성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교육 : 각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지원교육

3. FTA 국내 지원대책 관련 하부 정책 (Level 2)

♣ 다음의 설문은 FTA 국내 지원대책의 하부 정책인 직접피해보전, 경쟁력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3-1】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국내 지원대책 운용에 있어 **직접피해보전(A)**과 **경쟁력 강화(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직접 피해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경쟁력 강화	

- 직접 피해보전 : 농어업인 피해보전,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경쟁력 강화 :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농림 기술개발 지원

【3-2】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국내 지원대책 운용에 있어 **직접피해보전(A)**과 **소득기반 확충(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직접 피해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소득기반 확충	

- 직접 피해보전 : 농어업인 피해보전,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소득기반 확충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3-3】 귀하는 정부의 현행 FTA 국내 지원대책 운용에 있어 **경쟁력 강화(A)**와 **소득기반 확충(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정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기준(B)
경쟁력 강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소득기반 확충	

- 경쟁력 강화 :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농림 기술개발 지원
- 소득기반 확충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3-1. 직접피해보전 관련 핵심 사업 (Level 3)

♣ 다음의 설문은 직접피해보전의 핵심 사업인 **농·어업인 피해보전,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3-1-1】 귀하는 정부의 현행 직접피해보전의 핵심사업 중 농·어업인 피해보전(A)과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농·어업인 피해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 농·어업인 피해보전 :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등
-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 FTA 피해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3-1-2】 귀하는 정부의 현행 직접피해보전의 핵심사업 중 농·어업인 피해보전(A)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농·어업인 피해보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농·어업인 피해보전 : 농·어업인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등
-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비용 지원,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3-1-3】 귀하는 정부의 현행 직접피해보전의 핵심사업 중 기업인 무역조정 지원(A)과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기업인 무역조정지원 : FTA 피해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비용 지원,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3-2. 경쟁력 강화 관련 핵심 사업 (Level 3)

♣ 다음의 설문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업인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과 **농림 기술개발 지원**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3-2-1] 귀하는 정부의 현행 경쟁력 강화 정책의 핵심사업 중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A)**과 **농림 기술개발 지원(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농림 기술 개발 지원	

-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현대화, 대규모 산지 거점유통센터 운영 및 소규모 농공단지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발작물, 축산) 육성
- 농림 기술개발 지원 : 가축 품종개량·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 육성, 생명공학 기술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및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3-3. 소득기반 확충 관련 핵심 사업 (Level 3)

♣ 다음의 설문은 소득기반 확충의 핵심 사업인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과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 사이의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3-3-1] 귀하는 정부의 현행 소득기반 확충 정책의 핵심사업 중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A)**과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B)** 만을 고려할 때 어느 사업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A)	중요 ← ← ← ← ← → → → → → 중요																		기준(B)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지속가능 생산체계 구축	

-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밭농업 직불제 도입,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농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지속가능 생산체계구축 :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환경친화적 어구 보급,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및 바다 숲, 바다목장 조성 등

Ⅲ. 기타 사항

♣ 마지막으로 자료의 분석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사항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FTA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이나 정책제언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직군은 무엇입니까? (해당 부분에 V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수	연구원	관세공무원	FTA 관련 지원기관	관세법인	제조 및 서비스업	농·수·축산 가공업

2. 정부의 현행 FTA 지원정책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하거나 추가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자유로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